

교구자치화의 역사와 방향성 연구

양명일 기획실장

1. 서론: 교구편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교구편제 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

원불교는 교화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구 자치제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자치력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중앙집중적인 구조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원기 102년 교단 정책 의식조사에서 현행 교구제가 교화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재가 50.5%, 출가 57.3%로 과반수를 차지한 결과로도 확인된다.

더욱이, 현재 교단은 심각한 인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무출신(교역자)의 지속적인 감소, 특히 3~5급 교무의 부족 현상은 교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교역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매몰되어 교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은, 교구편제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행 교구 편제의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을 넘어선다. 과거 교구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 그동안 나왔던 분석 제안서, 연구서를 통해 현실적 위기를 명확히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원불교 교법 정신에 부합하면서도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궁극적으로 교화 활성화라는 교단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교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원불교 교구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교구 제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반이 된다.

2-1. 태동기 (원기 27년~원기 62년)

원기 27년 불법연구회 회규에서부터 교구의 전신인 '수반지부' 설치에 대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다.

제3절 지부 출장소

제60조 각지에 지부 출장소를 설치하고 교지를 선포하는 도장으로 함.

제61조 본지부간 역락의 편의와 당지부 회세 사항을 참작하여 수반지부(首班支部)를 지정함.

제62조 수반지부에는 회무소를 치하여 지부장이 회무소장을 겸임하고 관구내(管區內) 각지부 출장소를 통할함.

원기32년 원불교 교헌이 제정된 시점에도 교구제를 교헌에 표기하며, 교당 30개 이상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을 정도로, 실제로 1대말(원기36년) 교당수가 43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단 조직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인 교구의 탄생은 원기 62년 교구 규정 제정 및 12개 교구 설립에 이르러서야 교구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시작된 12개 교구는 아래와 같다. (괄호안은 교당수임)

1.서울교구(35)	2.대전교구(16)	3.대구교구(14)
4.부산교구(32)	5.전주교구(17)	6.이리교구(23)
7.광주교구(24)	8.영광교구(13)	9.제주교구(3)
10.마산교구(23)	11.정읍교구(18)	12.남원교구(17)

그러나 이 시기에 교구는 중앙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연락소' 기능에 머무르며, 총부 중심의 행정 체제를 유지했지, 교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미미했다. 이렇게 시작된 교구제도는 원기78년까지 20개 교구로 늘어나게 되며, 더 이상 총부 중심의 행정체제로는 발빠른 교화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2. 교구자치제 도입 논의와 시행 (원기 72년~원기 80년대)

원기 72년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에서 교구분권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대산종법사의 교시를 받들어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의 이양을 모색했으며,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편제를 개편하여 원기78년~79년까지 2년에 걸친 6번의 수위단회의(제3대 27회,30회,31회,37회,38회,43회)를 거쳐 현재의 13개 교구 체제가 확립되었다. 원기79년 7월 수위단회에서 결의된 교구자치화 시행 계획을 보면,

1. 필요성

가.”교당 제3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침”의 구현

나.대산종법사의 경륜 : 교단의 대내외적인 활동이 활발할수록 총부로는 교화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교구자치제 실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할것(77.11.18 제5회 중앙교의회 치사)

다.교구의 행정적 역할 증대(총부의 감량화)및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교

화의 실현.

라.현교구체제에 대한 개선의 의견 수렴과 국가의 지방자치제에 따른 대응

마.각급 법인의 적절한 분산과 교산관리체제의 분산

2. 목적

가.교화 활성화의 계기마련

나.전무출신의 정신적 분위기 쇄신

다.재가교도의 참여 확대

3. 기본방향

가.분권을 통한 교구 자율권의 신장으로 교단운영의 효율화를 촉진한다.

나.중앙은 고급 정책연구와 개발, 국제 및 대외 업무를 중심기능으로 하고 가능한한 인력을 최소화 한다.

다.전무출신의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교구 재정 자립도를 높히도록 한다.

라.교당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교도를 최우선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교단이 되게한다.

마.정부의 지방자치 행정과 연결하여 행정상의 편익과 관련 기관, 단체와의 유대를 높히도록 한다.

4. 교구체제 개편의 개요

가.교구체제

1)국가 지방자치 체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권 중심의 교구체제를 지방행정권 중심의 체제로 개편하되 광역 단체권을 기본으로 삼는다.

2)교세를 보아 2개 이상의 광역 단체권이 연합하여 1개 교구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3)교구는 행사보다는 행정 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사는 가능한 한 지역 단위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교화활동이 되도록 한다.

4)해외교구는 국내 교구 체제 확립 이후에 검토한다.

나. 재정 지원의 방향

1)입교금을 교구 재정 수입으로 한다.

2)의식수입의 일정액을 교구 재정으로 지원한다.

3)기타 교구 사업수입 및 회사금 수입으로 한다.

다. 사업관리의 방향

1)교화, 교육, 자선을 위한 사업기관과 수익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의료 및 약업에 관한 사업기관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행정 업무 및 인사권의 배분

- 1)교구장의 행정적 지휘권을 높인다.
- 2)행정업무는 각 해당 부서에서 매분기 계획을 세운다.
- 3)인사권은 업무배분 계획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마. 법인제도 확립 방향

- 1)재단법인은 교구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 또는 분리를 검토한다.
- 2)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교구 또는 지역별로 관리한다.
- 3)법인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정원장이 관리운영한다.
- 4)법인이사의 과반수는 전무출신이어야 한다.
- 5)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과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교정원장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가지고 원기80년에 출범한 12개 국내교구(교당수)는 아래와 같다.

가.중앙교구(32)

나.서울교구(56)

다.인천경기교구(18)

라.강원교구(13)

마.충북교구(8)

바.대전충남교구(26)

사.전북교구(77)

아.광주전남교구(63)

자.대구경북교구(25)

차.경남교구(45)

카.부산교구(43)

타.제주교구(11)

원기82년11월 제76회 수위단회에서 영광교구를 광주전남교구에서 분리 성지교구로 특화시켜 현재와 같은 교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3. 교구자치화를 위한 몸부림 (원기 80년시행이후~현재)

원기 80년 교구자치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편이후, 중앙총부에서는 바람직한 교구자치화를 위해 여러번의 연구와 분석, 그리고 제안이 이 시기에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많은 논의들이 오고갔지만, 교구자치화를 위한 시행이나 도입은 많지 않았다.

2-3-1. 원기82년 수위단회 전문위원 연구 (분석과전망 17호 이관도 교무)

1) 교정원의 시행 계획과 추진 현황

원기 80년부터 시행된 교구자치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 교구 자생력을 높이고, 중앙집권 체제의 유연성을 높여 교화 분위기를 쇄신하며,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통해 교단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화활성화'라는 상위 목적 아래 재평가되어야 한다.

1. 교구자치화 확립계획의 개요

가. 교구체제

① 국가 지방자치 체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권 중심의 교구체제를 지방행정권 중심의 체제로 개편하되 광역 단체권을 기본으로 삼는다.

② 교구는 행사보다는 행정 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사는 가능한 한 지역 단위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교화활동이 되도록 한다.

③ 해외교구는 국내 교구 체제 확립 이후에 검토한다.

나. 인사권 배분의 방향

① 교구 소속 재가교역자의 교구내 인사권을 교구로 위임한다.

② 교구 소속 전무출신의 교구내 인사권을 교구로 위임한다.

다. 재정 지원의 방향

① 입교금을 교구 재정 수입으로 한다.

② 의식수입의 일정액을 교구 재정으로 지원한다.

③ 기타 교구 사업수익 및 회사금 수입으로 한다.

라. 사업관리의 방향

① 교화, 교육, 자선을 위한 사업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의료 및 약업에 관한 사업기관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행정 업무의 배분

① 교구장의 행정적 지휘권을 높인다.

② 행정업무는 각 해당 부서에서 배분 계획을 세운다.

바. 법인제도 확립 방향

① 재단법인 원불교 업무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교구자치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교구별로 교구유지를 위한 유지재단 설립을 허용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별로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교구별로 관리한다.
- ③ 법인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정원장이 관리운영한다.
- ④ 법인의 운영은 이사회를 통하여 한다.
- ⑤ 특정법인 이사장은 수위단회에서 선임하며, 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전무출신으로 선임한다.
- ⑥ 특정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고정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과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교정원장에게 보고한다.

사. 교정원 관할 각 사업회의 관리운영 방향

- 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 ② 각 사업회의 관리는 교정원에서 한다. (원창회, 중앙봉공회 포함)
- ③ 회원관리 방식의 운영을 지향하고 교구별 분담금을 책정하여 재원을 확보한다.

2. 교구 체제의 개편

현재 20개 교구를 12개 교구로 조정하고, 북한지역에 평양교구와 원산교구를 둔다.

3. 연도별 업무 이관 계획

교정원의 연도별 업무 이관 계획과 추진현황은 (표 1)과 같이 업무이관 계획은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미이관된 업무는 규정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획실 : 이관 - 교구현황 발간

교화부 : 이관 - 선교소 설치 인가, 교당 부설기관 설치 및 폐지 (일부이관), 입교사무, 교적부 관리, 법위사정(법마상전급까지),

미이관 - 교당통폐합, 훈련원관리, 교당설립 인가(규정 개정 중),

총무부 : 이관 - 재가교역자 인사권, 교구내 기관및 단체설립

미이관 - 교구소속 전무출신 인사권, 근무성적 사정, 신분증명서 발급,

재무부 : 이관 - 교산관리, 교산처리(재원불교자산외),

공익부 :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관리

4. 교구의 조직 및 운영

1) 교구의 조직

교구는 교구장을 정점으로 하여 교구내 의결기구인 교구교의회와 교구 상임위원회, 집행기구인 교구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에는 교구의 기획 교화 훈련 복지 교당설립인가 교정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화과와 예산회계 교산관리 단체관리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두며, 수반지 교당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지역교화 협의회, 교육 훈련기관, 복지기관, 사업기관 및 각종 단체가 있고 각 교당들을 둔다.

2) 교구의 직제 및 업무분장

교구장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표2)와 같이 사무국에 교화과, 총무과를 두어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표2)

	교화과	총무과
--	-----	-----

단 위 업 무	기획, 교정지도, 교화, 교도훈련, 훈련원 관리, 입교업무, 법위사정, 교도 성적관리, 교당설치인가, 교당지원, 기관설립 및 단체등록, 단체관련업무, 사회복지업무, 봉공업무, 봉사업무, 은혜심기 운동, 연구업무, 교재발행, 교구통계, 홍보 및 공보, 기타업무.	인사관리, 복무, 요양에 관한 업무, 시상, 징계, 정년퇴임식, 법제, 문서관리, 직인관리, 청원서 업무, 증명발급, 교구 교의회 관련업무, 교구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 교구교무회의의 관련업무, 교구내 법인관리, 예결산 업무, 회계업무, 대외협력업무, 의전, 행사 및 의식, 기타업무.
------------------	---	---

시행 계획상에는 교화과 총무과 등으로 편성키로 되어 있으나 중앙교구 전북교구 광주전남교구는 총무과와 교화과를 두고 있고, 서울교구는 재무과와 기획과를, 부산교구는 청소년과를 더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기타 교구는 직제구분이 없이 사무국장과 주임 또는 주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구자치제 시행 당시 각 교구사무국의 인력배치 현황을 보자면, 서울교구는 원래 계획보다 1명씩이 증가되어 있으며, 부산교구는 계획대로 배치되었고, 그 외 8개 교구는 1명이 감소되어 있으며, 충북교구는 사무국장과 주사가 모두 청주교당과 겸임되어 있고, 강원교구도 주사 1인이 춘천교당에 겸임되어 있다.

2) 교구현황

교구 사무국의 업무와 기능(업무량 폭증, 인력 부족, 효율성 저하) 및 교구 재정 현황(세출 부문: 경상비 비중 높고 교화비 지출 적음, 교구별 규모 차이 큼; 세입 부문: 재정 자립도 취약, 교금·교구회비, 중앙 지원금, 회사금에 의존), 전략적 고려에 의한 배분의 차별화 필요

3) 종합평가

교정원의 교구자치제 추진 의지와 지원이 미미하며, 교구의 인력 배치 및 재정 지원 상태가 취약함, 또한 교구 재정 규모의 영세성과 교구 간 격차, 사무국의 업무 과다 심각

4) 교구자치제 완성을 위한 방향및 과제 제언

가.교구체제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맞춘 체제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층화된 조직 구성보다는 유동적인 조직 활용을 제안

나.교구청 기능의 효율성 제고

사무국 인력 보강(최소 5명) 및 조직 정비, 연구 기능 강화, 정보화 추진(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지역교화 활성화

지역교화 협의회 조직 및 기능의 효율화(소지역 단위 활동 활성화, 재가교도 활용)와 지역교화 기반 확충 및 기관 투자 추진

라.재정확충

재정 규모 대폭 확대, 교화비 지출 증가, 재정 자립도 제고(자체 수익사업 및 재가교도 중심의 후원 조직 운영)

2-3-2. 원기83년 교구체제변화가 미칠영향-기획실 연구

1. 단기적 변화

교당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화강화 / 지역실정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 개발 / 교구 행정력 향상

2. 중장기적 변화

인사제도의 변화 / 인재양성 제도의 변화

교당의 기능별 다단계화/훈련 및 총회제도의 변화

교구재정 자립도 향상 / 교도의 참여폭 확대

2-3-3.원기85년 전무출신 인사정책의 방향성 연구

육관웅 위원(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분석과 전망 25호)

1) 교구자치화에 따른 인사 관리의 문제점

현재 교구 자치화에 따른 인사 관리권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 실질적인 인사제도의 필요

단순한 인력 배치뿐 아니라 인력 수급 계획, 인재 교육, 생활 관리, 재교육, 교무 훈련, 퇴임 후 관리까지도 교구 실정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3) 인사 순환제의 문제

인사 순환제로 인해 성공적인 정책 교화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교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자의 교단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지역 교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12년 이상 한 교당 근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

4) 유임 조건 및 명확한 검증필요

교화가 발전적 기틀을 다지는 곳, 큰 불사를 치른 교당, 교당 신축 계획, 부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유임 조건에 대해 명확한 검증과 교구의 파악이 중요하다.

5) 특성을 달리하는 기관사이의 인사 교류 배제

교화기관, 교육기관 등 특성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인사 교류는 조직 정체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성격 유형이 비슷한 교당과 기관끼리의 교류성 인사를 통해 교구 자치화에 따른 인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6) 교구 내 전무출신의 인사방침

교구장의 교화권 확립이 중요하며, 교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교구 내 교무들의 인사는 교구장의 고유 권한으로 두고, 교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되어야 함. 또한, 교구에서 인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지역 출신을 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7) 특정 교구 부적응 대상 관리 및 장기 근무 방안

특정 교구에 부적응 대상이 있을 경우 타 교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함.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을 경우 예외를 두어 장기적으로 한 교구에 소속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2-3-4. 원기86년 1. 교구자치제에 대한 평가조사 설문분석<빈도분포>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

5. 교구 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종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긍정 55% (매우 좋은 방향 7%, 약간 좋은 방향 48.5%)

반반이다 32.7%

별로 좋지 않은 방향 8.9%

6. 전체적으로 교구 자치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82.2% (매우 바람직 49.5%, 약간 바람직 32.7%)

보통 10.9%

부정 5% (바람직하지 않다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

7. 앞으로 교구 자치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교구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가 29.7%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4.4%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1%, 현재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2%, 종전대로 모든 일을 총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

8. 교구 자치제가 교당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된다 62.4% (매우 도움이 된다 27.7%, 약간 도움 된다 34.7%)

보통이다 20.8%,

도움 안 된다 14.9%(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13.9%,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9-16. 교구 자치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교구 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교당 교화 및 개인 활동에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이었고,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 도움이 된 점

- ① 교구 중심의 교화 활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화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 업무처리가 쉽고 편리하다.
- ③ 훈련 및 감사관계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 ④ 교구에서 교당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 ⑤ 교구 실정에 맞는 인사를 하게 되었다.(아직도 총부에서 하지만)
- ⑥ 교무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다.
- ⑦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증대되었다.

☞ 좋지 않은 점

- ① 중앙총부를 향한 구심점이 산만해지는 느낌이다.
- ② 총부는 교구로, 교구는 지구로 잡무를 떠넘기는 느낌이다.
- ③ 교구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과 투자가 부족하여 그 효과가 떨어진다.
- ④ 전무출신 인사가 친·불친 등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
- ⑤ 교구간 격차에 따른 갈등이 크다.
- ⑥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인사권 확대, 경제권 확대, 중앙의 과감한 행정권 분권화 이행
- ⑦ 지구 편제가 되었으나, 교화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⑧ 교구장의 지도력이 부족하다.

18. 교구의 교화 계획이 교당 교화에 큰 도움이 된다

긍정 36.6% (정말 그렇다 6.9%, 그런 편이다 29.7%)

반반이다 37.6%

부정 19.8% (그렇지 않다 16.8%, 전혀 그렇지 않다 3%)

19. 교구의 행사들이 교당 교화에 도움을 주는 편이다

긍정 33.6% (정말 그렇다 7.9%, 그런 편이다 25.7%)

반반이다 33.7%

부정 29.7% (그렇지 않다 23.8%, 전혀 그렇지 않다 5.9%)

20. 교구 주최 교도 훈련은 큰 효과가 있다

긍정 45.5% (정말 그렇다 15.8%, 그런 편이다 29.7%)

반반이다 33.7%

부정 15.9% (그렇지 않다 10.9%, 전혀 그렇지 않다 5%)

21. 교구 주최 교도 훈련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긍정 59.4% (정말 그렇다 20.8%, 그런 편이다 38.6%)

반반이다 22.8%

- 부정 11.9% (그렇지 않다 9.9%, 전혀 그렇지 않다 2%)
22. **교구에서는 지역사회 봉공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긍정 42.5% (정말 그렇다 9.9%, 그런 편이다 32.7%)
 반반이다 38.6%
 부정 13.9% (그렇지 않다 11.9%, 전혀 그렇지 않다 2%)
23. **교구의 지역사회 봉공 활동은 교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
 긍정 56.5% (정말 그렇다 11.9%, 그런 편이다 44.6%)
 반반이다 26.7%
 부정 11.9% (그렇지 않다 10.9%,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교구는 지역사회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긍정 41.6% (정말 그렇다 12.9%, 그런 편이다 28.7%)
 반반이다 36.6%
 부정 16.9% (그렇지 않다 13.9%,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교구의 지역사회 시민운동이 교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
 긍정 40.5% (정말 그렇다 8.9%, 그런 편이다 31.7%)
 반반이다 37.6%
 부정 17.9% (그렇지 않다 12.9%, 전혀 그렇지 않다 5%)
26. **교구는 청소년 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긍정 40.6% (정말 그렇다 7.9%, 그런 편이다 32.7%)
 반반이다 30.7%
 부정 23.8% (그렇지 않다 20.8%, 전혀 그렇지 않다 3%)
27. **교구의 청소년 교화 정책은 교당 교화에 도움을 준다**
 긍정 26.7% (정말 그렇다 5.9%, 그런 편이다 20.8%)
 반반이다 34.7%
 부정 34.7% (그렇지 않다 29.7%, 전혀 그렇지 않다 5%)
28. **교구자치제 이후 현장 교화가 많이 활성화되었다**
 긍정 18.9% (정말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14.9%)
 반반이다 50.5%
 부정 25.8% (그렇지 않다 21.8%, 전혀 그렇지 않다 4%)
 효과적인 교화정책이 연구되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9. **교구 사무국은 우리 교당 교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
 긍정 25.5% (정말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23.8%)
 반반이다 47.5%
 부정 21.8% (그렇지 않다 17.8%, 전혀 그렇지 않다 4%)

교구사무국이 교당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

30. 교구자치제 이후 지역사회에서 원불교가 많이 알려졌다

긍정 28.7% (정말 그렇다 5.9%, 그런 편이다 22.8%)

반반이다 44.6%

부정 18.9% (그렇지 않다 14.9%, 전혀 그렇지 않다 4%)

교구자치제 이후에도 교구와 교당의 지역사회 홍보활동, 시민운동 참여와 봉공 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1. 교구는 좋은 교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편이다

긍정 39.7% (정말 그렇다 5%, 그런 편이다 34.7%)

반반이다 30.7%

부정 24.7% (그렇지 않다 18.8%, 전혀 그렇지 않다 5.9%)

교구에서 좋은 교화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32. 교구 자치제가 터전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긍정 42.5% (정말 그렇다 6.9%, 그런 편이다 35.6%)

반반이다 34.7%

부정 19.8% (그렇지 않다 15.8%, 전혀 그렇지 않다 4%)

33. 교구내 기관들은 교당교화에 관심이 많다

긍정 26.8% (정말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24.8%)

반반이다 45.5%

부정 21.7% (그렇지 않다 15.8%, 전혀 그렇지 않다 5.9%)

교구내 기관의 교화에 대한 태도변화가 촉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4. 교구내 기관들은 교당 교화에 도움이 된다

긍정 37.7% (정말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34.7%)

반반이다 43.6%

부정 14.9% (그렇지 않다 13.9%, 전혀 그렇지 않다 1%)

기관 운영이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35. 교구내 기관들은 사람들을 원불교로 잘 안내해 준다

긍정 15.2% (정말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14.9%)

반반이다 48.5%

부정 28.7% (그렇지 않다 26.7%, 전혀 그렇지 않다 2%)

기관 근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화 활동이 요청되고 있음

36. 교구의 인제는 교구가 알아서 길러내야 한다

긍정 50.5% (정말 그렇다 16.8%, 그런 편이다 33.7%)

- 반반이다 35.6%
- 부정 13.9% (그렇지 않다 9.9%, 전혀 그렇지 않다 4%)
37. 교구에서 추천·양성한 인재를 그 교구에 배치해야 한다
- 긍정 62.4% (정말 그렇다 33.7%, 그런 편이다 28.7%)
- 반반이다 24.8%
- 부정 9.9% (그렇지 않다 7.9%, 전혀 그렇지 않다 2%)
38. 교구자치 이후 전무출신 지원자가 증가하는 편이다
- 긍정 7% (정말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4%)
- 반반이다 37.6%
- 부정 47.6% (그렇지 않다 42.6%, 전혀 그렇지 않다 5%)
- 전무출신 지원자의 감소문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임.
39. 인사 배치권이 교구로 이양된 것은 잘한 일이다
- 긍정 47.5% (정말 그렇다 18.8%, 그런 편이다 28.7%)
- 반반이다 30.7%
- 부정 13.9% (그렇지 않다 10.9%, 전혀 그렇지 않다 3%)
40. 교구의 인사 배치권은 교화에 도움을 준다
- 긍정 37.6% (정말 그렇다 10.9%, 그런 편이다 26.7%)
- 반반이다 41.6%
- 부정 16.9% (그렇지 않다 14.9%, 전혀 그렇지 않다 2%)
41. 교구로 인사 배치권이 넘어온 후로 교무 처우가 좋아졌다
- 긍정 60.4% (정말 그렇다가 12.9%, 그런 편이다 47.5%)
- 반반이다 27.7%
- 부정 6.9% (그렇지 않다 6.9%)
- 많은 교무들이 교구로 인사 배치권이 넘어온 후로 처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음.
42. 제한적인 교무 초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긍정 49.5% (정말 그렇다 12.9%, 그런 편이다 36.6%)
- 반반이다 24.8%
- 부정 18.8% (그렇지 않다 15.8%, 전혀 그렇지 않다 3%)
43. 현 교구편제(국내 13개교구)는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 긍정 27.7% (정말 그렇다 5.9%, 그런 편이다 21.8%)
- 반반이다 31.7%
- 부정 33.6% (그렇지 않다 27.7%, 전혀 그렇지 않다 5.9%)
- 현재 교구 편제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4. 순교무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긍정 28.7% (정말 그렇다 8.9%, 그런 편이다 19.8%)

반반이다 43.6%

부정 24.8% (그렇지 않다 21.8%, 전혀 그렇지 않다 3%)

45. 문화사회부의 서울 이전은 교화에 도움이 된다

긍정 57.4% (정말 그렇다 19.8%, 그런 편이다 37.6%)

반반이다 32.7%

부정 5.9% (그렇지 않다 5.9%)

문화사회부의 서울이전은 잘된 일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46. 교금의 대부분이 교당 교화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긍정 80.2% (정말 그렇다 53.5%, 그런 편이다 26.7%)

반반이다 10.9%

부정 5.9% (그렇지 않다 5.9%)

47. 교금의 일부가 교구에 배당되어야 한다

긍정 73.3% (정말 그렇다 29.7%, 그런 편이다 43.6%)

반반이다 20.8%

부정 4% (그렇지 않다 4%)

48. 교구 내 사업을 위한 특별회사금이 증가한 편이다

긍정 44.5% (정말 그렇다 17.8%, 그런 편이다 26.7%)

반반이다 29.7%

부정 22.8% (그렇지 않다 20.8%, 전혀 그렇지 않다 2%)

49. 교당이나 교구에 수익 사업체가 필요하다

긍정 77.2% (정말 그렇다 36.6%, 그런 편이다 40.6%)

반반이다 16.8%

부정 3% (그렇지 않다 3%)

50. 교구자치제 이후 총부의 행정 서비스가 나아졌다

긍정 29.8% (정말 그렇다 5%, 그런 편이다 24.8%)

반반이다 48.5%

부정 14.9% (그렇지 않다 12.9%, 전혀 그렇지 않다 2%)

51. 최근 총부의 행정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긍정 36.7% (정말 그렇다 5%, 그런 편이다 31.7%)

반반이다 42.6%

부정 15.9% (그렇지 않다 13.9%, 전혀 그렇지 않다 2%)

52. 교구자치제 이후 교구 행정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

긍정 42.6% (정말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38.6%)

반반이다 40.6%

부정 11.9% (그렇지 않다 10.9%, 전혀 그렇지 않다 1%)

53. 교구 직원들의 직무수행 태도가 친절해졌다

긍정 48.5% (정말 그렇다 8.9%, 그런 편이다 39.6%)

반반이다 37.6%

부정 9.9% (그렇지 않다 8.9%, 전혀 그렇지 않다 1%)

총부보다는 교구의 행정서비스와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좋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와 친절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54. 중앙 총부의 경제 자립 기반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긍정 21.8% (정말 그렇다 3%, 그런 편이다 18.8%)

반반이다 51.5%

부정 23.8% (그렇지 않다 22.8%, 전혀 그렇지 않다 1%)

55. 교단에서는 교화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긍정 33.7% (정말 그렇다 9.9%, 그런 편이다 23.8%)

반반이다 44.6%

부정 19.8% (그렇지 않다 18.8%, 전혀 그렇지 않다 1%)

56. 교단은 인사 배치에서 교화에 가장 배려를 많이 한다

긍정 33.6% (정말 그렇다 15.8%, 그런 편이다 17.8%)

반반이다 27.7%

부정 32.7% (그렇지 않다 21.8%, 전혀 그렇지 않다 10.9%)

57. 교단은 교화에 교단의 자원(財源)을 투입하는 편이다

긍정 21.8% (정말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19.8%)

반반이다 33.7%

부정 38.6% (그렇지 않다 30.7%, 전혀 그렇지 않다 7.9%)

58. 총부는 교당 교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편이다

긍정 25.8% (정말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21.8%)

반반이다 45.5%

부정 23.8% (그렇지 않다 18.8%, 전혀 그렇지 않다 5%)

59. 나는 나의 인사 배치에 만족하는 편이다

긍정 37.7% (정말 그렇다 5%, 그런 편이다 32.7%)

반반이다 34.7%

부정 21.8% (그렇지 않다 12.9%, 전혀 그렇지 않다 8.9%)

60. 총부의 정책들에 대부분 공감을 한다

긍정 38.6% (정말 그렇다 6.9%, 그런 편이다 31.7%)

반반이다 38.6%

부정 20.8% (그렇지 않다 16.8%, 전혀 그렇지 않다 4%)

6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41.6%) ② 여자(50.5%)

62. 귀하의 연령은(만으로)

① 20-39세(32.6%) ② 40-49세(20.8%)

③ 50-59세(31.7%) ④ 60세 이상(11.9%)

63. 귀하의 현 소속 교구는?

(01) 강원교구 3% (02) 경기·인천 5.9% (03) 경남교구 4% (04) 광주·전남 6.9%

(05) 대구·경북 10.9% (06) 대전·충남 2% (07) 부산교구 10.9% (08) 서울교구 6.9%

(09) 영광교구 2% (10) 전북교구 12.9% (11) 제주교구 5% (12) 중앙교구 6.9%

(13) 충북교구 2% (14) 총부 20.8%

64. 귀하 근무지(사는 곳)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농촌·면지역 1% ② 읍지역 6.9% ③ 인구 5-10만의 소도시 5.9%

④ 인구 11-30만의 중소도시 32.7% ⑤ 인구 31-50만의 중소도시 16.8%

⑥ 인구 51-100만의 중소도시 7.9% ⑦ 인구 101만이상 대도시 25.7%

65. 귀하의 직책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기생들을 보아 판단해 주십시오)

① 교감(기관장,부장) 32.7% ② 주임교무(차장,국장,과장) 25.7%

③ 보좌교무(주임) 13.9% ④ 부교무(주사) 12.9%

⑤ 교구 교의회회장단 8.9%

66. (교무님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교무님의 실 근무 년 수는 얼마입니까?

① 1-10년(47.5%) ② 11-20년(14.9%) ③ 21-30년(17.8%) ④ 31년이상(19.8%)

위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자면, 교구자치제의 ‘당위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실행’과정과 ‘효과’에 대하여서는 의문과 아쉬움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방향은 맞지만, 그 길을 가는 방식과 실질적인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내용으로 읽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 **높은 원칙적 동의:** 교구자치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2.2%에 달한다. 이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지역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교무님들의 깊은 공감대를 보여준다.

- **낮은 체감 만족도:** 하지만 '교구자치제 이후 좋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 응답이 55%로 톱 떨어진다. 특히 '현장 교화가 활성화되었는가?'에 대한 긍정은 18.9%에 불과하고, 50.5%가 '반반이다'라고 답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는 제도의 변화가 현장의 실질적인 교화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이다.

- **점진적 개혁 선호:** 응답자의 64.4%가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이상을 향한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보완하며 나아가자는 안정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인터뷰 내용 정리 - 사무국장 6인, 전문위원 5인, 상임연구원 1인>

전체적으로는 교구자치화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함.
교구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구의 적정규모, 인력과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구자치의 재정

- ① 교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의미는 큼.
- ② 교구 재정자립을 위한 교화재단 설립 및 교금 수납과 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구의 독립 재정권의 부여로 교구의 교화활성화 촉구
- ③ 의식수입(교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사문제

완전한 인사권 이양은 아니나 그 효과는 긍정적임.

교구의 인사권 확대가 필요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순환제를 장기근속제로)

- ② 교구장의 리더십, 행정능력과 교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함.
- ③ 전무출신의 생활보장과 후생복지 문제

-조직

- ① 현재 교구편제를 대교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시범교구 운영이 필요하다.
- ② 총부·교구·지구·교당간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교구 교화정책과 교화부의 교화정책의 연관성이 부족함.
교화 위주로 행정업무 조정(총부와 교구)
지구의 교화 활동을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없다.
총부의 통합, 조정,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작고 효율적인 총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교구사무국 업무

- ① 자치화에 따라 업무이양이 있었으나 주로 잔무 위주이며 업무량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행정권은 이양이 안된 편임.
- ② 교구가 코디네이터(조정과 통합) 역할을 해야 한다.

-교구·지구·교당의 변화

- ① 교구자치화 후 변화된 조직운영과 교화 발전의 정도 그리고 그 연관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② 영세교당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무늬만 지방자치여서는 곤란하다.

<설문분석 및 인터뷰 결과 요약>

1. 교구자치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1) 대체로는 교구자치제가 교당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① 교구 중심의 교화 활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화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 업무처리가 쉽고 편리하다.
- ③ 훈련 및 감사관계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 ④ 교구에서 교당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 ⑤ 교구 실정에 맞는 인사를 하게 되었다.(아직도 총부에서 하지만)
- ⑥ 교무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다.
- ⑦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증대되었다.
- (2) 총부와 교구가 교당 교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음.
- ① 중앙총부를 향한 구심점이 산만해지는 느낌이다.
- ② 총부는 교구로, 교구는 지구로 잡무를 떠넘기는 느낌이다.
- ③ 교구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투자가 부족하여 그 효과가 떨어진다.
- ④ 전무출신 인사가 친·불친 등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
- ⑤ 교구간 격차에 따른 갈등이 크다.
- ⑥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인사권과 경제권 확대, 중앙의 과감한 행정권 이양.
- ⑦ 지구 편제가 되었으나 교화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⑧ 교구장의 지도력이 부족하다.
- (3) 교구자치 정착을 위한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교구자치제와 교당교화

- (1) 교구의 교화계획, 훈련과 행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실적으로는 교당 교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음.
- (2) 지역사회 시민운동과 봉공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함.
- (3) 교구의 청소년 교화 활동이 교당 청소년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4) 교구내 기관 근무자의 교화활동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함.

3. 전무출신 인재양성

교구에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출신 교구에서 근무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4. 인사관리

- (1) 인사배치권이 교구로 이양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함.
- (2) 인사배치권이 교구로 이양된 후 처우가 좋아졌다고 느낌.
- (3) 제한적인 교무초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4) 인사에 대한 불만이 큼.
- (5)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조직

- (1) 현 교구편제는 대교구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2) 문화사회부의 서울이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함.
- (3) 총부의 통합·조정·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작고 효율적인 총부로 구조조정)
- (4) 영세교당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재정

- (1) 교금은 교당 교화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2) 교구의 특별회사가금이 증가되고 있다고 느낌.
- (3) 교금의 일부가 교구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교구와 교당의 수익사업체가 필요하다 생각함.

7. 행정업무

(1) 행정권의 교구 이양으로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해짐.

(2) 총부와 교구 직원의 친절도가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 교당 교화를 위한 정책, 교화계획, 훈련과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3-5.원기87년도 교구자치제 정착과 발전 방향

원기87년도 수위단회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공동연구내용.(분석과 전망 29호)

1) 교구자치제의 의의 및 평가

원기 80년부터 시행된 교구자치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 교구 자생력을 높이고, 중앙집권 체제의 유연성을 높여 교화 분위기를 쇄신하며,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통해 교단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화활성화'라는 상위 목적 아래 재평가되어야 한다.

2) 교구자치제의 목적과 새로운 비전

교구자치제의 목적은 '교법의 실현을 통한 교구의 사회 기여', '교화의 원활화', '교구 행정의 원활화'이며, 그 기본 이념으로 '낙원공동체 건설'과 '교법의 사회 구현을 통한 낙원세계 건설'을 비전으로 한다.

3) 교구자치제의 기본 내용(구성요소)

새로운 평가(교화, 인사, 재정, 교당, 교역자 평가), 연구 기능의 강화(지역사회연구소, 교화연구소 설치), 평생 학습 체제의 도입, 새로운 정책 결정 구조의 형성, 새로운 정책 시행 촉구를 제안한다.

4) 교구자치제를 위한 제언

교구 구역 재획정(대교구제 도입, 교구간 격차 해소, 자족적 기능 유지), 지구 중심의 공동체 교화, 과감하고 신속한 권한 위임을 통해 총부의 기능은 이념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여타 기능은 교구에 이양해야 한다.

5) 교구자치제와 새로운 인사제도

교구자치제의 완성과 교화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인사제도(교구내 인사 순환, 교구에 인사권 위임,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구별 교화 공동체 개념을 통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제안

6) 교구자치제 정착을 위한 교역자 재교육 방향 탐색

교역자 능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무출신 재교육 정착과 전문 교역 능력 개발을 위한 새로

은 교육 체제와 환경 구축, 평생 학습 사회에 부응하는 교단 교육 기능 강화가 필요

7) 교구의 재정 자립 방향

교구자치제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재정 확충을 꾀으며, 의식 수입금의 교당 재투자 및 교구 배당, 대교구제 채택, 교구 자체 수입원 개발, 교구 정책 개발금 확보 등을 제안

8) 교구 구역 편제의 개편 방향

신앙공동체로서 적정 규모, 지역의 동질성, 교화활동의 유기적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교구제를 유지하되 지구 중심 교화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

9) 교정원 조직개편 방향

인적 자원 육성 및 관리, 정책 개발 능력 강화, 교정원의 서울 이전, 중앙총부의 성지 기능 강화, 효과적인 교단 행정, 교정원 조직 개편(교화지원 체제 강화, 교화재단)을 제안합니다.

10) 지구별 교화 공동체 제안

교화 침체 극복, 교화력 극대화, 공동체적 결합 유도 등을 위해 지구 단위로 인력을 배치하고, 공동으로 교화 활동, 연구, 학습, 훈련, 사회 활동 등을 수행하며 공동 평가를 받는 팀제를 제안합니다.

2-3-6.원기89년 교구 구역조정및 인력관리 방안 -미래의 총부와 교구 그리고 지구

성명종 위원(수위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분석과 전망 30호)

1) 중앙총부의 위상과 역할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춰 교단의 체제를 정비하고 변혁해야 하며, 중앙총부의 위상과 역할을 종 법사와 수위단회를 중심으로 교단의 법통을 잇고 성지로서의 위상을 진작하는 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또한, 행정 업무는 교구로 이양하여 교구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교화의 활력을 찾아야 함.

2) 인력관리의 구역 재배치

제1안 : 현 교구를 서울, 부산, 대구, 중부, 대전, 광주, 전북, 총부직할의 8개 형태로 조정

제2안 :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의 3대 권역으로 조정

전 교역자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인사를 배치하고, 장차 인력 수 급 및 인사 순환도 각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교구의 역할

중앙총부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 업무를 이관받아 교구가 행정과 교화 지원의 중심 역

할을 하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함. 각종 행정 업무 총괄, 대교구 내 인사 및 기관 관리, 교화 중심의 지원 업무 전반을 교구의 업무로 명시해야 함.

4) 인력의 특성화 및 전문화

출가교역자의 성향, 특기, 적성, 역량에 따라 도시, 중소도시, 농촌, 특수 교화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 개 교당 중심의 교화를 넘어 지역 또는 지구 단위의 교화 체제로 전환하고, 지구(지역) 단위 연계 교화 및 연대 교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입체적인 교화를 모색하고 강화해야 함.

5) 고려사항

교당의 구조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그리고 교헌 및 법규 정비(체제의 변혁)가 필요함.

2-3-7.원기89년 지방분권화 시대의 교구자치제도 정립을 위한 시론

-교구의 새로운 이해와 설계를 위한 구상들 -

김경일 위원(수위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분석과 전망 30호)

1) 논의의 배경

세계와 대한민국 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특히 참여정부의 분권화 시대 흐름 속에서 교화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교구 분권 및 자치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 소태산 대종사의 '조선 불교혁신론' 정신을 이어받아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쇠망의 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구 교화 제도의 이념적 규명뿐만 아니라 현실적 혁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함.

2) 교구제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위한 중심 단서들

새로운 교구제도는 중앙총부의 기능 분할 및 다운사이징, 교단의 교화 위주 재편성과 지역 단위 교화 인프라 구축, 지역 문화의 다양성 반영과 중앙총부의 통합성 고려, 교구 및 교당의 실질적 교화권 확보, 그리고 인문 분위가 아닌 신앙과 수행, 교화 시스템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함.

3) 새로운 교구 설계를 위한 구상들

가.교구의 역할

법신불(사은)의 지역사회를 향한 신앙과 수행 중심 도량이며, 단순한 관리 행정 업무 중심 공간이 아님. 참배와 기도 도량, 영모전 운영, 경전 강독 프로그램, 선방, 다양한 봉사 및 선행 교도 단체 활동의 중심지 역할 수행

나.전법교화의 중심도량

교구는 지역사회에 오직 전법교화의 사명을 다하는 존재 의의를 가지며, 교구장은 지역 통할권과

교화권 확립을 통해 궁극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인사권, 감사 및 징계 권한, 교육 및 훈련권, 법호 및 범위 사정권, 선교소 설치권, 교금 배정권 등 다양한 교화권 확보가 필요함.

다. 현실적인 운영 방안

현재 교구 인프라 부실을 고려하여 수반 교당 겸임 형태를 제안. 교구장은 종법사가 임명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가지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화 통치(행정)권 행사가 가능해야 함. 또한, 교구장의 임기 보장(최소 6년 이상, 적정 12년)과 함께 교구 교의회, 교무평의회의 견제 장치 확보가 필요하며, 교구 사무처(국)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4) 새로운 교구제도 논의와 함께 고려할 사항

새로운 교구제도는 총부(주법)에 대한 종적 전통의 계승과 함께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보, 교구장의 순명과 재가출가 공의 제도의 조화로운 결합, 총부의 지배 최소화 및 지원 시스템 확대, 제도 혁신 과정에서의 혼란 수용, 교구 내부 핵심 역량 축적 노력, 시범 교구 지정 및 평가, 그리고 교구 자치와 분권 확대가 교화 활성화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또한, 시대의 키워드가 중앙, 통제에서 지방, 자율, 분권 등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헌신성이 필요함.

5) 교구의 구역 재편성안

실질적인 교구 자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13개 교구를 8개 교구로 재편성하는 안을 제시. (서울, 부산, 대구, 중부, 충청, 광주, 전북, 특별교구(익산군산지역)로 재편)

6) 결론

시대 변화를 감안할 때 교구 분권 및 자치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조속한 수용이 불가피함. 중앙총부의 위상 변화, 교당 현장 중심의 교화력 증진 및 활성화, 교단 행정 전반의 수술 및 정비, 새로운 전법교화공동체의 시도, 교구장의 리더십 확보와 교구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임.

2-3-8.원기90년 기획실 연구 - 교구자치 강화안

1) 재정권 강화

재단법인 분리, 교구별 법인 설립
법인업무는 총무과에서 수행 또는 법인과 신설

2) 교화권 강화

법위사정 항마위까지 시행
재가교도 원성적 관리

사업성적 관리(법 혼자만 중앙총부에서 관리)

입묘자 관리

3) 인사권 강화

지구장 인사권 교구 이양

교구내 인사 순환 시스템 도입

타교구 전출 파견 시스템 도입

교구별 임기보장제 및 임기순환제 재량껏 시행

출가교역자 원성적 관리

2-3-9.원기91년 지방분권과 교화발전을 위한 교구 자치제의 향후방향

-지구 조직 정비의 필요성 방안 -

김윤태 위원(수위단회 교화훈련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분석과 전망 32호)

1)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국은 중앙집중적인 국가 발전을 추진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지위와 재량권 행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교단적 입장

교화 발전을 위해 교구, 지구, 교당의 재량권 확대를 모색 중이며, 지방분권 정비가 현장 교화와 교단 제도 효율화에 중요하다고 본다. 출가교화단 규정 2조와 9조 3항을 통해 교구장과 지구장이 당연직 단장이 되어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지구 조직의 미비점

교구는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보이지만, 현장 교화의 실질적인 장인 지구는 조직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지구는 국가 조직의 자치단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4) 지구 활성화의 필요성

가.교화활성화 방안

현재 지구는 교화 중심 기구보다는 연합 모임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현장 교화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구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소그룹 단위의 지구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교화 및 현장 교화를 책임지고, 교당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나.교화 공동체로서의 필요성

교무 혼자 교화 활동을 하거나 업무 부담이 큰 교당이 많은 현실에서, 지구별 교화 공동체 운영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역사회 교화 참여 증대, 교당 운영 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다.교역자 재교육의 장

현장 교역자의 재교육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공동 설교안 작성 및 현장 교화에 필요한 내용 토론 등을 통해 자체 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라.교역자간 공동체 정신 함양

열악한 교당 경제 상황과 교역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역자 공동 임용제와 같은 방안을 지구 단위에서 먼저 검토하여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마.기타

교역자 사기 진작과 정신적 해이를 막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지구의 준 행정조직화 필요성

현재 교구는 행정조직의 단위인 반면 지구는 연합체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화만을 전담하는 준 행정조직으로서 지구의 역할이 필요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준 행정조직화해야 한다.

2-3-10. 원기96년 교구자치화에 따른 중앙총부와 교구의 위상과 역할

배현송 기획실장 제3차 교구자치화 세미나-교정원 기획실

1) 교구자치화의 배경및 목적

교구자치화는 시대 변화와 교화 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제기되었으며, 중앙총부의 권한을 교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앙총부의 위상과 역할

교단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신앙의 중심이자 법의 근원지이며, 최소한의 행정으로 핵심적인 지원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출가교역자 인재 관리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교구의 위상과 역할

교구 내 교화, 교육, 자선사업의 중심체로서 지역교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교육 및 자선복지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교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4) 중앙총부와 교구의 관계

집권과 분권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며, 자치 체제와 통제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단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중앙총부의 통제는 법치 교단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입법 통제와 감찰

통제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

5) 향후 과제

교구자치화는 교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이며, 재산권, 교산 운용권, 교화권, 인사권 등의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구는 자치 능력을 키우고, 중앙총부는 교구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화단과 교구 자치가 조화를 이루어 교단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2-3-11. 원기100년 교구자치화에 따른 인사제도 연구

박명은 전문위원 수위단회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분석과 전망 35호)

1) 들어가는 말

교단 성장의 핵심은 사람이며,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교단의 인력관리 현황

최근 6년간 교당 및 기관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전무출신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미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소년 교화를 이끌어갈 4, 5급 전무출신 수가 크게 감소했다.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가 탄생하였고, 원무,정무 제도는 교당 교화권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교구자치화에 따른 전무출신 인사제도의 변화

원기 95년 교정핵심정책으로 교구자치화를 선정하고 교구 인사 제청권 확대, 임기 순환제 정착 등의 변화가 있었다. 원기95년 교구 사무국장 설문조사 결과, 인사권이 중앙총부 중심으로 회귀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교구 인사권 이양을 위해 중앙총부의 인사권 축소, 교구장 임면제청권 전면 보장, 교구장 임기 보장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임기 순환제는 12년 보장 교구 내 순환 임기제가 적합하며, 직능별 순환제 도입 의견도 있다.

4) 교구 자치화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향

가.출가교역자 인사제도 정비로 효율적 인력관리 필요

비집무자 관리 시스템 마련, 중앙과 교구의 인사권 역할 조정, 교구장 인사권 보장 및 확대(최소 6년 임기, 대교구제 시행), 기간제 전무출신 제도 활성화가 필요함.

나.재가교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

원무 제도의 확대, 원불교학과 재가 졸업생 활용, 재가 중심의 교당 운영(교당 사무장 제도), 유급직 재가 인력 활용이 제시되었다. 출가교역자는 교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 실무는 재가

교도가 담당하는 직무 분담이 필요함.

2-4. 교구법인 분리 정책(교구법인의 탄생) (원기 93년~99년)

원기 93년부터 추진된 교구법인 분리 정책은 교구의 재정적 자립과 책임 경영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결과, 교화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재정 기반이 취약한 대부분의 교구(서울교구 제외)에서는 법인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자치 역량 확보 없는 형식적인 제도 도입의 한계를 보여줬다.

2-4-1. 원기92년 6월 중앙총부회의

교구자치기반 구축정책 실무자 모임

교구법인분리에 관한 기존 연구자료 브리핑, 향후 진행 계획 논의

2-4-2. 원기93년 총단회 보고

교구 유지재단 설립방안

2-4-3. 원기93년 기획실 실행(교구 유지재단 설립 및 지원(법인설립 등기이전))

1) 교구별 유지재단 일괄 설립(13개교구)

교구의 재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법인설립 등기 전 단체의 성격인 재단 설립
기존 교화지원기금의 명칭 변경

2) 기금설립시 총부에서 유지재단 기금 지원

13개 교구에 매년1천만원씩 3개년 지원(93~95)
법인설립전 회사자산은 단체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 후 이관

2-4-4. 원기93년~99년(교구법인 분리 준비 및 시행 일정)

관련회의 - 17회 진행 / 관련세미나 - 1회 진행 / 관련설명회 - 2회 진행
주요내용 : 교구유지재단 설립방안, 재산권이양에 따른 변화와 준비(인사권), 교금제도 변화 등에 대한 발표

2-4-5. 원기95년/96년 교구법인 분리

원기95년 1차 법인분리 - 3개교구(대전충남교구,부산교구,서울교구)
원기96년 2차 법인분리 - 5개교구(광주전남교구,경기인천교구,경남교구,대구경북교구,전북교구)
교회발전기금 전달식 '2억원'

2-4-6. 교구법인 분리의 기대효과

의식및 제도 등의 변화를 통한 현장 활성화와 원불교 100년 기반확립
책임소재 명확 / 효율적 재산관리 / 실질적인 행정 / 재가들의 역량강화가 뚜렷 / 생기있는 역동적인 교단

2-4-7. 추진 당시 세미나에서 나온 기대효과

행정자치제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 구성원, 조직을 한번 뒤집어 인식전환 가능
구성원의 인식개선(자율과 참여) / 교구장 권한 강화로 일관된 정책구현 가능
교구 구성원 단합 용이함, 교구장의 권한이 강화 될 것이다.
교구-지구-교당의 자율성 확보로(책임성) 현장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출가. 재가 교도들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 재가교도의 참여폭 확대, 자발적 교회
자발적 교회, 장기적인 계획 수립가능, 효율적 교산관리, 교구재정이 좋아질 것이다.
교회구조 개편, 통폐합이 용이해진다. 교회시스템의 유동성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교회활성화 기대
지역교회현장 환경 변수에 따른 대처용이, 시대변화에 대한 역동적 대응, 적합한 조직 인력구성 용이

2-5. 흔들리는 교구법인 분리 정책(다시 통합인가?) (원기 100년~104년)

원기100년에 접어들면서 교정원 법인사무국에서는 교구법인 운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고서의 골자는 다시 교구법인을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원기103년 6월 임시수위단회에서 교구법인을 통합하자는 결의가 되었고, 다음해 원기104년 11월에 다시 '교단의 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결의를 하게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예중이다. 빠른 시일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2-5-1. 원기100년 5월 교구법인 운영검토 보고서 보고

- 교정원 중요정책협의회에서 교정원 법인사무국에서 교구법인 운영검토보고서 보고

1.원불교 교구자치제 추진개요 2.교구법인 설립 및 운영현황 3.교정원 법인국의 실무 지원내용
4.교구자치제 시행 자체 중간평가 5.교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성과분석 6.법인분리와 통합운영 기대효과 비교분석 7.원불교행정 발전을 위한 당면 해결과제 8.법인분리에 따른 문제제기 9.교구법인 통합 행정절차 10.법인통합시 사전 검토사항

2-5-2. 원기100년 9월 후반기 교구장협의회

- 법인분리 현황 점검의 건 상정(법인사무국) 내용 중 원불교 법인분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1) 불완전한 재산분리와 사용

- (1) 교구법인간 재산거래 재)원불교-개인, 단체, 교구법인, 복지·교육법인 / 승인없으면 불법거래
- (2) 건물관리비 사용 재)원불교명의 통장-어린이집건물, 임대건물, 복지건물사용 / 불법사용
교구법인명의 통장- 재원불교명의 건물 관리비사용/ 불법사용
- (3) 통장사용 재)원불교명의 통장- 원불교 교구법인에서 사용 / 불법사용
- (4) 수익, 보육, 복지사업등이 있는 부동산은 이전보류 중
- (5) 1개교당에 건물은 교구법인소유 토지는 원불교소유로 중복됨
- (6) 산하시설들의 법적책임은 원불교에 관리책임은 교구법인에 있다.

2) 원불교 교구자치제 목적달성에 비효율적이다.

- (1) 교단의 교산 효율적 이동과 사용의 어려움 (2) 교단의 출제가 전문인재 한계
- (3) 원불교 조직은 하나이나 정부행정기관은 9개 부서에서 관리감독
- (4) 9개법인 운영의 책임은 어느 곳이나 모두 원불교이다
- (5) 교단 운영체제와 완전한 교구자치제 목표간 불일치
- (6) 교단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법인간 거래시 사회법이 우선 적용된다.

2-5-3. 원기102년 11월 교구자치화 세미나

- 교구법인 통합 다시 할 것인가?

원기95~97년 교구자치화(송천교당 배현송 교무)

법인분리 정책의 난제와 실효성 검토(법인사무국 조성원 교무)

교구법인 분리 통합문제에 대한 의견(서울교구 김창규 교의회 의장)

2-5-4. 원기103년 2월 교구법인에 대한 김앤장 법무법인 의견서

- 세무문제 요약(법인통합 vs 분리)

교구법인분리에 관한 기존 연구자료 브리핑, 향후 진행 계획 논의

통합운영 : 내부거래로서 세무상 특별한 문제없음, 교구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 충족 - 통합법인만 신고하면 됨.

분리운영 :

(자산이동시)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절차가 필요)

(자산사용시) 저가/무상 임대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 위배문제 및 법인세법상 부

당행위계산부인 문제 발생가능, 따라서 적정임대료를 수령하여야 함(추가적인 세무신고 문제 발생)
(자금대여시) 저가/무상 대여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 위배문제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발생가능, 따라서 시가 이자율로 대여해야 함(추가적인 세무
신고 문제 발생)
(세무신고) 교구법인 별로 신고하여야 함

2-5-5. 원기103년 4월 교구법인 및 회계시스템 정책 토론회

- 가. 교구법인 분리 미완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이광규)
- 나. 교구법인 분리 시행에 대한 의견(최용선)
- 다. 원불교 회계제도개선 방안(이건중)

2-5-6. 원기103년 6월 제233회 임시수위단회 통합운영 결의

안건 : 교단의 교구 법인정책 심의의 건(법인통합)
결의 : 원안대로 교단의 교구 법인정책에 대하여 교구자치제를 위한 권한은 강화하고 법인은 통합 운영하기로 결의하다.

2-5-7. 원기104년 11월 제240회 정기수위단회 ‘교구법인 통합정책 시행 유예’

안건 : 교단의 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 시행 유예 요청의 건
결의 : 원안대로 제233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결의된 ‘교단의 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다
내용 : 제233회 임시수위단회(103.07.10)에서 ‘교단의 교구 법인정책에 대하여 교구자치제를 위한 권한은 강화하고 법인은 통합 운영하기로 결의’ 하였고, 법인의 통합 운영은 원기 105년(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정책에 따른 세무 및 회계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와 자산의 법적소유자와 사용자의 분리에 따른 회계상의 혼란, 법인업무의 전문인력 양성 과제 등의 해결을 위한 시급성이 요청되어 법인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인통합의 실현을 검토한 결과 1. 교구자치 실현과 교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의 정책방향에 따른 교구자치제 정착과 완성이라는 방향과 일치되지 않은 점,
2. 교구별 지역 특성에 따른 효과적 교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구편제 개선을 위한 연구시간이 필요한 점,
3. 법인을 통합운영할 경우 다시 분리하기 어려운 점등이, 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에 대한 유예를 하게된 이유였다.

2.6. 계속되어지는 교구편제 연구 (원기 95년~현재)

원기 104년부터 다시 교구편제 논의가 활발해진다. 104 교정팀에서는 교정정책으로 ‘교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을 삼았고, 107년 교구편제를 단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106

년 이른바 ‘전서사태’이후 활발하게 추진되던 정책은 다시 중단되었다.

2-6-1. 원기104년 교구편제 관련 교정정책과 연구보고

104~106 교정정책 [교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에 의거하여 교구편제 개선 사업을 추진

2-6-2. 원기104년 4월 교구자치제 방향성 연구보고서(정책연구소)

1) 교구법인 분리 정책 평가

원기 95년부터 시행된 교구법인 분리 정책은 교화 성장이나 재정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영세 교구에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서울교구를 제외한 7개 교구 법인을 총부 법인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

2) 대교구 편제안 제시

총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역 중심의 분권적 대교구 체제로 전환을 제안하며, 근접성, 균형 분할, 자치 가능 규모를 기준으로 2개~6개 대교구 편제안을 비교. 교단 전반의 영세성과 재정 불균형이 대교구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확인함.

3) 대교구 법인설립의 비용 및 편익

대교구 법인 분리 시 자산 이전 세금(약 36억~56억 원), 전산 시스템 개발 비용(약 3~4억 원), 행정 비용 증가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편익으로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교산의 효율적 사용 등이 있다.

4) 대교구제 시행을 위한 제언

총부의 지원 중심 역할 재정립, 법인 운영의 전문성 강화, 인사권 및 예산 조정 권한 이양, 회계 시스템 구축, 교육 및 복지 본연의 목적 회복, 정책 평가 지표 개발 등 교단 전반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 교구법인이 교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 서울교구를 제외한 7개 교구법인을 총부법인으로 통합 후 교단행정의 정비 필요
- 미래의 대교구제 시행을 위해 서울교구법인 유지는 바람직함
- 현재 가용한 교화상황 자료 분석을 통한 대략적 교화현황 진단을 추가적으로 진행함과 아울러 교화현장의 방문 및 심층면담,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정원 각 부서별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구자치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2-6-3. 104-106 교구편제 개선 진행보고 (기획실)

- 104.09.02 교구장협의회 안전협의
- 105.06.09 교구편제 준비모임 3차례(기획실/교화훈련부/총무부/정책연구소/법인사무국)
- 105.07.09 교정원 간부연수시 안전 검토
- 105.07.22 의장단협의회시 원기109년 목표일정
- 105.11.09 정기수위단회 교구편제개선 중간보고
- 105.12.21 혁신위원회 구성(원의회 상임위원회)
- 106.01.13 혁신위원회 핵심실무자 회의진행
- 106.01~02 교구자치화 관련자료 모음집 제작및 보급
- 106.02~03 혁신위원회 교구장 인터뷰 진행

2-6-4. 교정원및 교구체제 혁신위원회

목표

- 1.교단4대 효과적인 교화와 교단발전을 위해 교정원 조직과 교구편제를 개편 하고 교단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2.교화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대교구제를 도입 하고, 교화단 중심의 교화활동 연대가 용이하도록 교구제를 개편한다. 시행시기는 원기109년으로 한다.
- 3.교정원 조직규정, 교금규정, 전무출신인사임면규정, 재가교역자인사 임면규정 등을 개정하여 교화현장중심의 교단운영이 되도록 한다.
- 4.교구법인에 관한 정책은 교구자치정책과 조화되도록 한다.
- 5.국내 13개교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나 특별교구와 국외교구의 방향도 함께 설계한다.

2-6-5. 107-109교정정책 수립

- 「107-109 교정정책 3-2. 총부, 교구편제 정비」수립
- 기획실장 13개 교구장 면담 : 교구상황과 교구편제에 대한 의견수렴 / 대교구제 편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나, 코로나19이후 교구의 상황이 편제를 논할만한 상황이 아님을 호소.
- 총부,교구편제정비 개선 실무팀을 구성하여 교구편제 논의를 하는것에 그침

3. 현재 교구편제의 문제점 심층 분석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들과 정책추진백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자면, 대부분의 제안들이 몇가지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으며,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현 교구 편제 및 자치화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3-1. 불완전한 권한 이양과 중앙집권적 구조의 잔존

교구자치화의 핵심은 인사권과 재정권의 실질적인 이양에 있으나, 이 과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교구 자치화'의 이상은 중앙총부가 핵심 지원에 집중하고 교구

가 현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총부에 집중되어 있다. 교구는 자율성보다는 중앙의 규정과 지침에 강하게 예속되어 있어, 지역 교화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남아있다.

3-1-1. 제한적인 인사권

교구에 일부 인사권(인사제철권, 교구 내 전무출신 배치권 등)이 이양되었으나, 이는 완전한 인사권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체 인사책임은 아직도 중앙총부에 있고, 교구는 인사제청권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정기인사의 책임을 교구는 총부에, 총부는 교구에 책임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교구 간 인력 교류, 신규 인력 충원 등 핵심적인 인사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총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교구가 지역 상황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데 제약을 가한다. 또한, 순환 보직 중심의 인사 시스템은 지역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여 '장기근속제 도입' 등의 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장기근속자가 교구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다보니, 인사의 형평성 문제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3-1-2. 명목상의 행정권 이양

중앙의 업무가 교구로 이관되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의 이양보다는 단순 집행 업무의 이관('집무 이양')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구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중앙의 지침을 실행하는 중간 기구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3-1-3. 중앙총부의 역할 재정립 지연

교구자치화는 중앙총부가 '작고 효율적인 총부'로서 정책 연구, 통합 조정, 지원 기능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중앙총부의 조직 개편과 기능 전환이 이에 상응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2. 교구 재정 자립의 구조적 한계

재정 자립 없이는 실질적인 자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료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교구 재정 구조는 대부분 매우 취약하다.

3-2-1. 취약한 자체 수입 구조

교구 재정은 개별 교당의 교구비와 회사성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분석과 전망 29호에서는 재정 지원이 소규모이며, 자립을 위해서는 '교금 수납과 운용권' 자체를 교구에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앙 중심의 재정 구조는 지역 교화에 재투자될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3-2-2. 유지재단 및 법인 운영의 한계

재정권 강화를 위해 교구별 유지재단 설립(원기 93년) 및 법인 분리(원기 95-96년)가 추진되었으나, 초기 지원 규모가 작았고(유지재단 3년간 매년 1천만 원 지원, 법인분리 2억원), 재단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교구 재정에 기여하는 모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2-3. 개별 교당의 영세성 문제

교구 자치의 근간이 되는 개별 교당 다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원기109년 교당급지 4,5,6급지가 전체 교당수의 52%), 아래 도표의 각 교구 급지평균을 보면 어려운 교구일수록 급지평균이 낮다는 것을 볼수 있다. 당연한 말일수 있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강원	경인	경남	광전	군중	대경	대충	부울	서울	영광	전북	제주	중앙	충북
4.8	3.3	3.8	3.6	6.0	4.3	4.0	3.2	2.5	3.7	3.6	4.4	2.7	5.3

교당의 자생력 부족은 곧 교구 재정의 취약성으로 이어지며, 교구가 자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동력을 약화시킨다.

3-3.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개교당 중심주의의 한계

교구 편제 개편과 조직 구조 변경이 있었지만,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교단 운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인력난의 악순환이다. 중앙총부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은 교구와 교당에 과도한 행정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심화되는 전무출신 인력난(특히 3~5급 교무 부족) 속에서 교역자들이 행정에 매몰되는 현상은 교화력 약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있다. 현재의 '성직자 중심 행정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개(個)교당 중심주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교단의 시너지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3-3-1. 교구 편제 규모의 적정성 논란

현행 13개 교구 편제가 자치 역량을 갖추기에 적절한 규모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효율성을 위해 5~7개의 '대교구제'가 제안되었고(원기 72년, 원기79년), 원기 86-89년 평가에서도 대교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원기104년에도 대교구제 시행을 원기109년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교구별 교세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인 자치 모델 적용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구편제의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구편제 시행을 하지못한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 인사적 여건의 한계가 있었음에 결정을 못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2. 교구 리더십과 행정 역량의 한계

교구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교구장이 교구청 소재 교당의 교무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교구 전체의 행정과 교화 전략 수립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구 사무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일상 업무 처리에 급급하여, 전략 기획이나 교당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3-3-3. 체계적인 연계 부족

총부-교구-지구(지역교회협의회)-교당 간의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특히 교구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교회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3-4. 현장 교화 활성화와의 괴리

교구자치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장 교화의 활성화이지만, 제도적 변화가 실제 현장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3-4-1.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

교구 단위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부와 교구의 교화 정책 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방침이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3-4-2. 교역자 역량 개발 시스템 미비

교회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교역자의 역량 부족이 지적되며, 교구 단위의 교역자 재교육 및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교회 대학원 개원 제안 등). 현재 시스템은 현장 교역자들의 역량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3-4-3. 재가교도 참여의 형식화

교구자치제는 재가교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교구 운영 및 중요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출가 교역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재가교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권한 부여가 부족하다.

3-5. 법인 분리에 따른 행정 부담 및 관리의 어려움

교구의 법적,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인 분리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적 부담을 야기했다.

3-5-1. 행정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족

법인 분리로 인해 교구별로 처리해야 할 법인 행정 업무가 증가했으나,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했다. 재산 관리, 회계,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오히려, 교화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분산시킬 우려가 있었다.

3-5-2. 관리 및 통제의 문제

중앙총부 입장에서는 법인 분리로 인해 통제권 약화, 법적 분쟁 소지, 중요 교산 처분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원기 102년에 '교구법인 통합 다시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법인 분리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3-6. 종합 의견

기존의 연구분석 제안서들은 원불교가 교구자치화를 통해 교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권한 이양,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역량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완전한 자치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교구 편제는 중앙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구자치화의 본래 목적인 현장 교화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과거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 특히 인사권과 재정권의 과감한 이양, 중앙총부와 교구의 명확한 역할 재정립, 그리고 교구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교구자치화로 가기위한 당면 문제 극복을 위한 제안

현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교구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극복 방안의 실행이 시급하다.

4-1.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책임 경영 확립

명목상의 분권을 넘어, 교구가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갖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4-1-1. 인사 자주권의 획기적 보장

-인사권 전면 이양: 교구 내 인력 배치, 평가, 이동 등 실질적인 인사 운영 권한을 교구에 전면 이양해야 한다. 중앙총부는 전체 인력 수급 계획 및 교구 간 조정 등 기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 전문가 양성 (장기근속제 도입): 과거부터 지적된 순환 보직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교화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근속제' 또는 '임기보장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4-1-2.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교금 제도 개혁 검토: 중앙 집중식 교금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교구의 재정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先) 교구 확보, 후(後) 중앙 분담' 방식 등 근본적인 수입 구조 변화를 검토하여, 교구에서 수입된 재원이 지역 교화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재원의 흐름을 현재와 역방향으로 전환하여, 교구 수입의 일정 비율을 총부교금 형태로 중앙에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포괄 예산 지원 도입: 중앙의 지원 예산은 항목별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구가 자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포괄 예산 지원(Block Grant)'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4-2. 교구 행정 역량 강화 및 전문화

이양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무출신 인력 감소와 행정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직자 중심 행정'에서 '전문가 중심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4-2-1. 교구장 리더십의 전념 환경 조성

교구장이 교구청 소재 교당 교무직을 겸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교구 전체의 비전 수립과 전략 기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 분리가 필수적이며, 교구장의 임기를 6년이상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구의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

4-2-2. 교구 사무국 기능 강화 및 전문화

교구 사무국을 '교구처'로 격상시키고, 행정, 재무, 기획 분야의 전문 인력(출·재가 포함)을 확보해야 한다. 교구장 및 교구처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 경영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4-2-3. 통합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Shared Service Center)

법인 분리로 인해 가중된 행정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 '통합 행정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률 자문, 통합 회계 시스템, 재산(법인) 관리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구가 교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중앙총부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화

교구자치화는 중앙총부의 혁신과 병행되어야 한다.

4-3-1. '작고 효율적인 총부' 구현

집행 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중앙총부는 교단의 핵심 가치 수호, 중장기 정책 연구개발(R&D), 국제 교화, 교역자 양성 및 재교육 등 거시적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4-3-2. 조정자 및 지원 플랫폼 역할 강화

중앙총부는 지시와 통제가 아닌, 교구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교구 간 협력을 조율하는 '플랫폼'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중앙총부 교정원의 역할을 규제 중심에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이단치교 원리에 맞도록 중앙 및 지방 기구도를 개편해야 한다.

4-4. 현장 중심 시스템 구축 및 참여 확대

제도 개선이 현장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4-1. 지구(지역교회협의회) 활성화

교구와 교당을 잇는 중간 조직으로서 지구(지역교회 협의회)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개별 교당이 하기 어려운 단위 지역내 연합 활동(훈련, 봉사, 공동 홍보)의 중심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지구는 반드시 행정중심이 아닌, 교화 활성화를 위한 중심체이어야 한다.

4-4-2. 재가교도의 주체적 참여 확대

교구교의회를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결정의 장으로 만들고, 주요 위원회에 재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4-4-3. 영세 교당의 구조적 개선

개별 교당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되, 자생력이 현저히 부족한 영세 교당은 통폐합하거나 특정 기능에 특화된 센터 형태로 전환을 모색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5. 미래 교구 편제 방향성 제안 (장기 과제)

장기적으로 교구 편제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자치 역량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광역 교구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한다.

5-1. 전략적 광역 교구제(대교구제) 도입

현행 13개 교구 체제의 한계(교세 편차, 규모의 비효율성)를 극복하고, 과거부터 논의된(원기 72년, 79년, 86-89년, 104년) 대교구제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원불교 고유의 '이단치교'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목표: 규모의 경제 실현, 행정 효율성 증대, 안정적인 자치 기반 마련.

구조: 교세, 지리적 인접성, 행정 역량을 고려하여 현행 교구를 7~9개 내외의 광역 교구(대교구)로 재편한다.

역할 분담: 광역 교구는 행정, 재정,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지역 총부' 역할을 하고, 산하의 기초 단위(지구)는 행정 부담 없이 현장 교화 실행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다.

5-2. 교구 역량에 따른 차등적 자치 모델 적용

모든 교구에 동일한 수준의 자치화를 요구하기보다, 교구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 자치 모델을 적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형화 및 맞춤 지원: 재정 자립도, 행정 역량 등을 기준으로 교구를 유형화(예: 자립형, 성장형, 지원형)한다. '자립형' 교구에는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원형' 교구에는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5-3. 단계적 추진 로드맵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단계 (준비 및 시범 운영): 현 체제 내에서 극복 방안 제안을 우선 시행하고, 객관적인 '교구 자치 역량 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다. 역량이 성숙한 교구를 '자치 시범 교구'로 운영한다.

2단계 (전환 및 통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통합을 추진하여 광역 교구를 출범시킨다. 법인 운영 모델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한다.

3단계 (안정화 및 연합 체제 완성): 광역 교구가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고, 중앙총부와 교구, 교구와 교구 간 수평적 협력과 소통 중심의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예: 전국 교구장협의회 위상 강화)를 완성한다.

6. 결론 : 교화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대전환의 촉구

본 연구는 원불교 교구자치화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 현행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위기를 진단하며,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원기 70년대부터 본격화된 교구자치화 논의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화를 실현하려는 교단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연구와 제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구자치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 결과, 교구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인사권과 재정권의 불완전한

이양으로 인한 중앙집권적 구조의 잔존, △교구 재정 자립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성직자 중심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에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교구자치제가 바람직하다는 높은 원칙적 동의(원기 86년 설문조사, 82.2%)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화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동일 조사, 18.9%)로 증명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현재 교단이 직면한 심각한 전무출신 인력난과 맞물려 교화 침체라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점진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선 교단 운영의 총체적 혁신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그 실천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실질적인 분권과 책임 경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교구자치화의 성패는 인사 자주권과 재정 자율성의 획기적인 보장에 달려 있다. 특히 중앙 집중식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선(先) 교구 확보, 후(後) 중앙 분담' 방식으로의 전환 등 교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된 재원이 지역 교화에 우선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행정 시스템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통해 교화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성직자 중심 행정'에서 '전문가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여 교역자들이 교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구 사무국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중앙의 통합 행정 지원 시스템(Shared Service Center)을 구축하며, 재가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총부의 역할을 '지원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총부는 규제와 집행이 아닌, 정책 연구개발(R&D), 통합 조정, 교역자 양성 등 거시적 기능에 집중하는 '작고 효율적인 총부'로 거듭나야 하며, 교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광역 교구제(대교구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 13개 교구 체제의 규모적 비효율성과 역량 편차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7~9개 내외의 광역 교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광역 교구가 '지역 총부'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 단위(지구 및 교당)는 현장 교화 실행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한다.

교구편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의 문제를 넘어, 교단의 생존과 직결된 교화 활성화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연구와 논의를 넘어선 과감한 구조적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통해 현장의 활력을 회복할 때, 원불교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